

SPECIAL REPORT **중일SUNDAY·興時齋** 공동기획 트럼프 참모들이 전한 트럼프의 구상

트럼프 時代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전략을 구사해 절대적 지지층을 만들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한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위대한 미국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 같은 슬로건으로 기독교 정치를 혐오하는 유권자들의 감성을 사로잡았다.

트럼프에겐 모든 게 협상 가능… 한국 “방위비 분담, FTA

김현중 전 통상교섭본부장·전 유엔대사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미시간·위스콘신·오하이오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후보 시절 첫 승리를 안겨 준 아이오와주, 심지어 조 바이든 부통령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이변을 낳았다. 기독교 정치인과 내용 없는 슬로건을 앞세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는 접근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소수 민족, 특히 아랍계를 잠재적 테러범으로 간주하고 히스패닉계를 범죄자로 간주하며 추방시켜야 한다는 증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 승리 직후 첫 연설에서 트럼프는 사뭇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당선 후 첫 연설에서 트럼프는 이전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얼굴 표정까지 격조 있게 변한 모습을 보여 줬다. 후보 시절 연설과는 달리 트럼프는 경제성장을 두 배 증대와 모든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강조하며 갈등보다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형적인 반기독교적 협상가 자질을 엿볼 수 있었다.

협상가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킨다. 첫째는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한다. 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측 불허다. 따라서 자기 본심과는 정반대로 발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둘째는 상대방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판을 벌인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자기만의 정보 수집을 한다. 트럼프의 반기독교적 경향은 마이클 펜스 부통령 후보 및 보좌관들이 전략이나 정책 수정을 제안해도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외교안보팀은 클린턴과는 매우 다른 접근방법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예측해야 한다. 접근방법이 바뀌었는데 기존 틀과 방식대로 움직이면 백전백패한다.

트럼프 당선 후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는 미국의 기존 사고방식을 대변하는 클린턴의 보좌관들과 트럼프 쪽 전문가들의 생각·성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클린턴이 당선됐을 경우 외교안보 분야에 입각할 예정이었던 톰 도널던 전 외교안보실장 겸 인수위 부위원장,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차관,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 제임스 스태브리디스 전 제독 등은 북한 문제를 최우선순위 과제로 지목했다. 클린턴은 국무장관 시절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을 적극 이행했다. 또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그의 e메일에 의하면 중국에 북한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미사

일방어(MD) 체계로 중국을 포위하겠다”고 압박했다. 클린턴이 당선됐다면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반면 트럼프 측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핵 문제를 활용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선 캠페인 당시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주요 인물로는 뉴트 김리치 전 하원의장, 그가 추천한 존 볼턴 전 유엔대사,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클 플린 전 국가정보국 국장, 알리드 파레스 전 외교안보보좌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북핵 문제보다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및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과 관련한 의제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100%로 증대하는 것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또는 폐기가 있다. 트럼프는 “한국을 공짜로 보호해 줄 수 없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미 FTA 때문에 “10만 개의 일자리를 뺏겼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한민국 수출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은 150% 급증했고 그 액수가 미국의 대한민국 적자의 두 배에 달한다는 사실에 심한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대한민국 서비스 교역에서의 미국의 100억 달러 무역 흑자와 무기 수입 78억 달러(2014년 기준)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를 활용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안보팀은 트럼프 당선인 측에 군사비 분담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미 FTA도 재협상할 의사가 없으니 폐기하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야

핵 재처리, 핵잠수함, 통화스와프 등 물밑협상 하며 반대급부 명확히 해야 무기수입 안 할 수 있다는 것 비춰야

미, 한국에 무기수출만 78억 달러

서비스교역 100억 달러 흑자 빼고

트럼프, 한·미 FTA로 적자 급증 주장

한다. 그 와중에 미국과의 타협 여지를 검토하면서 반대급부로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아마도 우라늄 고농축 재처리, 3000t급 핵잠수함 건조, 미 연방준비제도와외 통화스와프가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 통상 분야에서는 한국·북한·중국·몽골과 유라시아 관세동맹 5개국(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을 포괄하는 대규모 FTA를 출범시킴으로써 미국의 동북아 정책 수립에 있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고하게 하여 한·미 FTA 폐기를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 역시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 주둔비용 분담 증대를 요구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선수들

은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처럼 “방위비 분담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한·미 FTA 재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의 국익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고,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필자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힐러리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외교안보 전문가가 여러 명과 토론을 했다. 다음은 토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해 익명으로 문답을 정리한다. 괄호 안에 필자의 견해를 보충했다.

-워싱턴의 정통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한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트럼프의 생각과 성향을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는가.

“트럼프가 저술한 책 『회귀의 기술(The Art of the Comeback)』에 언급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트럼프를 이해할 수 있고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접근방법 또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저서에서 ‘거레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파악해야 한다. 상대방의 정서와 동기를 파악하지 못하면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언급했다. 북한 문제에 있어 트럼프는 전형적인 미국 외교안보 사고방식이나 틀에서 벗어나 기업인의 입장에서 감정을 연구해 분석한 뒤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직접 대면해 핵 문제를 해결하려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만들겠다는 일화에서 잘 나타난다. 유세 중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만들겠다’며 ‘그 비용은 멕시코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 발언을 통해 미국 대중과 멕시코 정부의 관심은 장벽을 세우느냐 여부가 아니라 비용 부담으로 옮겨졌다. 미국 유권자들 생각에는 장벽은 이미 세워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솔직하게 말하면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현재진행형’이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그림들은 있지만 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아직 고민 중이라는 뜻이다. 일단 우리는 미국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짚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핵심 이익이 문제가 되는 지역에선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트럼프의 생각이다.”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한국과의 안보 동맹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다. 트럼프의 선거 연설 중 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발언이 한국 사회에 큰 뉴스가 된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100%(한국이 주둔비용 전부를 부담한다는 의미)’라는 그의 표현이 이슈가 됐다고 들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가 집권하면 주한미군기지가 한국 사회에 가져다주는 혜택에 비례해 공정하게 부담하기 위한 대화(혹은 협상)를 요구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무역 균형이 한국에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미국)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한·미 동맹의 큰 틀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에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 측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지 역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이슈 중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이다. 우리(미국) 시각에서 볼 때 중국에는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 상품에 대해 45% 징벌적 관세를 검토할 것이다. 중국이 우리 국채 1조4000억 달러어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치 않다. 남중국해에서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 미국은 1947년부터 91년까지 전 세계를 운영하는 방침과 시스템이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한 이후 새로운 시스템을 수립하지 못했다. 세계를 운영하는 보다 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북핵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예정인가.

“5차 핵실험은 질적으로 과거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 동맹국에 가하는 위협 수위, 둘째 김정일의 불안정한 판단력, 셋째 소형화를 포함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보유, 넷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핵무기를 개발한 위반행위와 확산 위험이다.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다는 것은 위협의 차원이 다르다. 미국 정치 시스템은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을 허용할 수 없는 체제다. 북한에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지만 배제할 순 없다.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상의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으로 향한 위협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다. 북한이 테러집단에 핵무기를 확산하는 것도 미국은 허용할 수 없다. 전쟁은 끔찍한 것이다. 핵전쟁



지난 9일 대선 승리 직후 연설 단상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가 막내아들 배런과 부인 멜라니아, 장녀 이방카, 사위 쿠슈너(왼쪽부터)를 바라보고 있다. [AP=뉴시스]